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실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은 아니다.

권력자들은 안다. 바지 사장과 직원 몇 명 구속하고, 내각 교체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몇 명 옷 벗기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걸 말이다. 이제 이 망각의 악순환을 끊자.

참사 원인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개선과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 사고책임에서 면죄되는 소유주들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은 선주의 탐욕이다. 20년 가까이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안전 기준도 일체 무시하고 과적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운행을 책임질 선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숨겨진 실제 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는 이렇게 쥐어뜯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빼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법적으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여러 계열사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압력행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론 무마용으로 처벌하겠단 것이다.

이런 경영 방식은 세월호만의 사례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다. 위험한 공정은 도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하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아예 통째로 법인을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면 사업주는 안전설비에 대한 비용을 낮춰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될수록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 책임을 물을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은 미미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득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는 돈을 벌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 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소유주가 포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접고용, 간접소유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여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래야 한다.

실소유주가 안전사고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성공장의 불산유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시민 피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이견희 씨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제철에서 노동부 특별감독 속에서도 십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몽구 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매년 산재로만 2천여 명이 죽는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벌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재벌 오너의 이익이 절대적인 한국에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부는 지금까지 소유주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서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고 당일 날까지도 규제철폐와 공공부문의 수익성 중심 개편을 외쳤던 정부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가 일정 수습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은 비호하면서 안전은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방향을 180도 전환하지 않고 몇몇 책임자만 경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부가 책임을 온전히 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정부의 무능한 초동대처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이지만,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말처럼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부처별로 대응본부가 난립하고, 구조작업마저 특정기업에 외주화한 것은 서해 페리호 사고가 일어났던 20년 전에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재난대응체계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고 이후 실제 진행된 구조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여 구조체계의 무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 시민안전 위해, 민주노총이 일어서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 6년 동안 억제된 실질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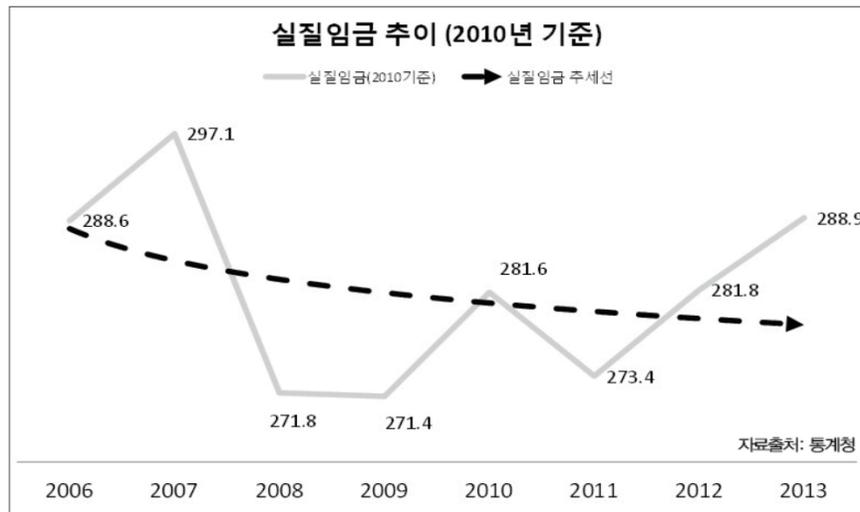
## 노조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쟁취하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3년 실질임금은 288.9만 원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07년 당시 실질임금 297.1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노동자 전체가 6년 전 임금수준을 받고 있는 셈이다.

### 저임금노동자, 40만원 인상 요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임금이 고작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까?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50.9시간을 일했고, 그렇게 해서 월 114.6만 원을 벌었다. 중하위권 노동자들



은 45.3시간을 일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일부만이 41.4시간 일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주40시간 노동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액은 43.7만 원이다. 고정급 92.8만 원 밖에 못 버는 저임금노동자들은 이 만큼 올라야 136.6만 원을 벌 수 있다. 아이 한명

키울 수 있는 2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 (146.1만 원)에도 못 미치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어떻게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항변한다.

###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 전국적 임금인상투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랜 기간 실질임금이 억제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강경한 저임금정책을 편 탓도 있겠지만, 한편에서 노동조합 운동도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임금을 올릴 방법은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뿐이다. '노조할 권리'의 확대와 노동자 공동의 요구를 통해 억눌린 임금인상투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 모든 시민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나서자

노동운동이 많이 힘들다. 정권은 백주대낮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며 민주노조 운동을 앞둔다. 2010년부터 계속되는 복수노조를 이용한 민주노조 탄압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위축되어 있다. 여기에 진보정당들은 사분오열되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길을 잃었다. 2014년 노동절을 맞아 현재 민주노조 운동이 재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운 세대와 부문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일이다. 조직 노동이 의식적으로 가장 많은 자원을 조직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세적 실천 과제다.

### 노동운동의 새 세대가 필요

첫째, 노동자대투쟁과 노동법개정 총파업으로 만들어진 현재 민주노총 운동이 세대적 순환을 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주축이었던 세대가 정년 퇴직으로 회사를 나가는데 반해, 청년들의 노조가입은 많지 않다. 전략적으로 조직화에 투자해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어쩌면 민주노조 사활의 문제다.

### 계급 대표성의 확보

둘째, 조직 노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 조직화를 우회할 수 없다. 저성장과 권리의 파괴를 대다수 민중들이 경험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권리를 지

켜 온 조직 노동이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베와 같은 극우적 흐름에게 조직 노동은 언제나 공격의 1순위다. 조직 노동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계급의 대표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계급 대표성을 확보하는 길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함께 노조를 만드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 새로운 힘의 원천

셋째,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제조건도 바로 조직화 운동의 성공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원천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와

에너지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주류언론과 권력이 숨긴 진실들을 찾으며 노조 활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우리가 신규 노조들 속에서 매번 보게 되는 이 에너지를 보다 집단적으로 조직해내야 한다.

### 모두에게 노조할 권리를

2014년 노동절,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연맹에서 전략조직화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직 노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시대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은 우리가 만나는 시민 모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Alternative Worker's Movements

지음으로 연구소 소개 알림마당 연구마당

### 연구보고서

2014-04-16

**[중영상보고서] 삼성전자AS기사 임금체계 쟁점과 문제점**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업체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건당수수료를 손보겠다는 건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노조 때문입니다. 노조가 결성되고 처음으로 제대로 노동과계약을 보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Alternative Worker's Movements

### 언론기고 & 보도

[칼럼]신자유주의시대 국민의 안전 2014-04-23

대단하다. 공공운수 서경지부 2014-03-12

삼성왕국 광역이 갈라지는 소리 2014-01-23

제법과 한국의 노동시장 2014-01-22

박근혜 정부의 구조적 취약성과 노동운동 2014-01-17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곁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있습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사업장 분석과 노동조합 진단 및 제언, 지역·산업 조사와 조직화 전략, 국제연대 전략** 등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노조 강화를 위해 조합원 및 간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http://www.awm.or.kr>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02-778-4003로 연락주시시오.